

勞 動 經 濟 論 集  
 第30卷(3), 2007. 12, pp. 103~13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유 경 준\*\*

본고는 ①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②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주제어 : 상대적 불평등, 절대적 불평등, 양극화, 빈곤 감소적 성장

\* 본고는 '소득불평등도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라는 제목으로 2007년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출판된 보고서를 재정리한 논문이다. 본고의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 학교를 섭외하고 직접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고의 개선에 도움을 준 익명의 두 레프리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 한국개발연구원(yoogi@kdi.re.kr)

## I. 서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이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 또는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흔히 접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소득불평등도는 흔히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한다. 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소득불평등도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 낸 개념이다.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로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경우 한 사회의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하였을 경우 불평등도의 변화가 없게 된다. 즉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각 구성원의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에서 다음해에 각각 200만원, 400만원으로 되었을 때 지니계수로 포착되는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을 이러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아닌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소득격차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 소득격차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하게 되어 소득불평등도는 두 배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 문헌에서 등장하는 극화(polarization) 개념은 소득분포 상에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 불평등도는 증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이 극화 지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경우에 따라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불평등도를 추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소득분포의 극화—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본 공리하에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바꾸어 주면 비교되는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본고는 다음 상호 연계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공리체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Amiel and Cowell(1992)이 사용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소득불평등도의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조사·분석된 Amiel and Cowell(1992)의 외국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각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이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의 이론적인 공리체계와 실제 추정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양극화 관련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단서를 얻고자 함이다.

세 번째 본고를 통하여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문조사의 결과와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수들의 실제추정치 비교를 통해 파악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국의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른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공리체계의 설명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설문의 구성에 대한 설명과 소득불평등도의 전체 및 개별 공리체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즉 일반대중이 소득불평등도의 일반적인 공리체계의 각 구성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외국과 비교되어 설명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지만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공리체계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도 지수에 대한 대안(alternative)으로 다양한 불평등도 지수가 제안되어 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지수(bi-polarization

measure)도 그러한 대안적 불평등도 지수의 하나이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공리체계에 입각한 각종 소득불평등도의 추정을 통해 이들이 실증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이론적 기반을 가진 지수들이 실제로 소득분포 변화에 있어 서로 다른 측면을 포착하기 때문에 정책 지표로서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V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문의 분석과 불평등도 지수들의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소득분배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 II. 불평등도의 공리체계

소득불평등도(inequality)와 빈곤(poverty), 후생(welfare)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과 후생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석의 한 부분으로 사용된다. 소득불평등도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보다는, 소득 전체의 분포를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더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분포의 아랫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과 상위 부분도 중요하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 소득분포의 변화는 상위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득불평등도는 후생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생과 소득불평등도가 모두 전체의 분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불평등도는 분포의 분산(dispersion)만을 고려하는 데 비해, 후생은 평균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세 가지 개념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지수에 따라 위 세 개념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공리에 기초하고 있다.

## 1. 익명성(anonymity)

대칭성(symmetry)이라고도 불리며, 소득불평등도는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 외에 다른 특성이 변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의 변화는 없고 그들의 소득이 서로 바뀌는 경우(permutation)에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각 가구의 순서별로  $A = (1, 2, 3)$ 에서  $B = (3, 2, 1)$ 로 변화하였을 때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다.

이 원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평등도 비교에 있어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모두 이 원칙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약 두 집단을 구성하는 그룹이 가축원 수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예를 들어, A의 구성원은 부부 2인만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A'의 구성원은 부부와 자녀 등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 각 구성원의 소득분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두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2.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A = (5, 8, 10)$ 에서 모두 두 배 증가하여,  $B = (10, 16, 20)$ 으로 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다.

이 소득동차성은 비율적인 곱으로 변하는 경우와 더하는(빼는) 것으로 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인 소득동차성을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변환비의존성(translation independence)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Amiel and Cowell 1999). 즉, 변환비의존성은 원래의 소득분포  $A = (5, 8, 10)$ 에서 사회구성원 모두 5만큼 소득이 증가한  $B = (10, 13, 15)$ 로 되는 경우도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다고 간주한다.

분산(variance)이나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는 규모비의존성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인 절대적 지니계수(absolute Gini coefficient) 역시 규모비의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sup>1)</sup>

### 3.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

인구비의존성(population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분포와 동일한 소득분포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복제되어 두 소득분포가 합해지는 경우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득분포가  $A = (5, 8, 10)$ 인 사회에 동일한 소득을 가진 쌍둥이들이 등장하여  $B = (5, 5, 8, 8, 10, 10)$ 이라는 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없다.

### 4. 이전 원칙(transfer principle)

피구-달톤 원칙(Pigou-Dalton principle)이라고도 하며, 사회구성원의 전체 평균소득의 변함이 없이 부자가 빈자에게 소득을 이전(mean preserving income transfer)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득분포가  $A = (1, 4, 7, 10, 13)$ 인 사회에서  $B = (1, 5, 6, 10, 13)$ 인 사회로 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하게 된다.

분산(variance)과 로그분산(log variance)은 이 원칙을 위배하며, 후술하는 극화 지수(polarization measure)들은 이 원칙을 깨고 등장한 지수들이다.

### 5. 분해성(decomposability)

이 원칙은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소득불평등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 집단의 불평등도가 변하는 경우 전체의 불평등도도 같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의 소득분포가 각각  $A = (3, 10, 11)$ ,  $B = (5, 6, 13)$ 인 경우 소득분포가  $C = (7, 9)$ 인 제3의 집단과 각각 통합되어  $A' = (3, 7, 9, 10, 11)$ ,  $B' = (5, 6, 7, 9, 13)$ 으로 변하는 경우  $A'$ 과  $B'$ 의 소득불평등도 순위는 통합되기 이전인  $A$ 와  $B$ 의 소득불평등도 크기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해성을 제외한 앞의 네 가지 원칙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로렌츠 곡선을 통한 소

---

1) 모든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2배가 되면 분산(variance)은 4배가 된다. 따라서 규모비의존성에 위배되며, 표준 편차와 절대적 지니계수도 정의에서 살펴보면 역시 위배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득불평등도 크기 비교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나, 분해성 원칙에는 위배되더라도 앞의 네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불평등도 지수라면, 로렌츠 일치(Lorenz consistence)와 동일한 소득불평등도 크기 비교를 보장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집단지수(generalized entropy class measure)는 위 5가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Cowell 1995). 이들은 집단 내(within-group) 불평등도와 집단 간(between-group) 불평등도로 쉽게 분해되며 분해된 각 불평등도의 합은 전체의 불평등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Atkinson류의 불평등도 지수는 집단 간과 집단 내 불평등도로 분해되거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니계수의 경우는 부분집단의 인구분포가 겹치지 않는 경우 분해되거나 겹치는 경우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 Ⅲ. 설문의 구성과 분석 결과

#### 1. 설문의 구성

본고를 위한 설문의 구성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2단계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은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속되는 두 가지 특정한 소득분포인 A와 B 중에서 더 평등한 소득분포를 고르라는 내용이다. 소득분포는 벡터(vector)의 형태로 제공되며, 화폐 단위가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숫자들에 대응되는 생활수준 또는 후생수준에 대한 아무런 암시도 받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일반적인 소득분포에 대한 가정들을 접하게 되고, 가상적으로 변화하는 소득분포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불평등도 중에서 응답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하나를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숫자로 구성된 첫 번째 질문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설문을 답변한 후 응답자들은 첫 번째 설문의 답을 다시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있다.

또한 문장으로 구성된 설문에는 “모두 답이 아니다”라는 답변 항목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응답자의 견해를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하여 응답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설문은 1988년과 1989년 두 해 동안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총 1,1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부표 참조).

한국의 경우는 <표 1>에서와 같이 2007년 3월 중에 서울의 2개 대학(서울대, 한양대)과 경북대학, 전남대학 등 총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국내 대학 경제학과 2학년생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함인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미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숫자 개념이 무디어 설문에 성실히 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조사 기준을 경제원론 정도의 수업을 듣고 소득분배론 수업을 듣기 이전인 경제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제학과 외의 학생이나 2학년이 아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는 별도의 항목을 포함하여 학과의 구분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수업 이전에 들은 경제학 과목 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 1> 설문조사의 대상 및 인원

학교(수업명)	지 역	응답자 수
경북대(불평등의 경제학)	경 북	273
서울대(미시경제이론)	서 울	202
전남대(산업경제학)	전 남	88
한양대 1(미시경제1)	서 울	76
한양대 2(공공경제1)	서 울	52
전 체		691

## 2. 설문 분석 결과<sup>2)</sup>

설문의 결과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분석의 체계를 Amiel and Cowell(1992)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 좀더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2) 본고는 설문 내용의 일부만을 분석하였다. 설문에는 있으나 본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란다. 또한 본고의 부표에 외국의 설문 분석 내용이 동일한 표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학교나 전공 그리고 경제학 과목의 수강 정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별 공리체계 공리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개별 분석 뒤에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공리체계 전체에 대한 동의 정도와 불평등도 비교 시에 이행성(transitivity)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기본 공리체계 중 첫 번째인 익명성(anonymity)은 자명한 원칙이라 판단하여 별도의 설문을 하지 않았다.

## 가. 소득동차성

### 1) 설문 내용

설문지의 질문 1)과 질문 2)는 간단히 두 가지 숫자들의 배열을 이용하여 규모비의존성과 변환비의존성의 원칙에 대해 응답자의 견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질문 1)은 소득 분포 A의 구성원 모두가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질문 2)는 소득분포 A의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5단위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10)과 11)을 통해 문장으로 제시하였으며, 질문 11)의 경우에는 같은 양을 더해 주는 것 외에 빼 주는 것에 대한 변환비의존성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 2) 설문 결과

문 1)과 문 2)의 설문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문장으로 표현한 문 10)과 문 11)의 답변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소득동차성 중 규모비의존성에 대하여 숫자 질문 응답자의 절반(47.2%)과 문장 질문 응답자의 41%가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각각 35%와 40%)에 비하여 높은 수치(부표 2 참조)이며, 외국의 경우 숫자 질문이나 문장 질문에 대하여 소득불평등도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각각 51%와 47%)가 다수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 것은 상당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소득불평등도 공리체계의 주요한 한 축으로 사용하는 규모비의존성이라는 기본 공리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그림 1) 소득동차성에 대한 설문

## &lt;숫자 질문&gt;

다음 아홉 개 설문(문 1~문 9)에서는 두 가지 소득분포(A와 B)를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A 또는 B에 대하여 좀더 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 분포가 동일한 평등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A와 B 모두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 |                   |                  |
|-------------------|------------------|
| 1) A = (5, 8, 10) | B = (10, 16, 20) |
| 2) A = (5, 8, 10) | B = (10, 13, 15) |

## &lt;문장 질문&gt;

- 10)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이 다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의 “실제 소득”이 모두 두 배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 a) 각 개인의 소득 비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았다.
  - b)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 c) 소득이 두 배가 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욕구 만족을 위한 돈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질문 1)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A = (5, 8, 10) B = (10, 16, 20)

- 11)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이 다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더해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 a)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소득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 b) 불평등도는 변하지 않았다.
  - c)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한 소득을 더해 주는 대신에 각각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감해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득불평등도는 ---.

- a) 같다
- b) 증가하였다
- c) 감소하였다

위의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하여, 질문 2)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A = (5, 8, 10) B = (10, 13, 15)

한편 소득동차성 중 변환비의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사회구성원의 소득에 같은 정도의 소득을 더해 주면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다는 답변이 숫자나 문장 질문 모두에서 59%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 소득동차성에 대한 설문 결과(숫자 질문)

	응답자 수(명)	소득 2배 증가(문 1)			소득 5단위 증가(문 2)		
		감소 (%)	증가 (%)	불변 (%)	감소 (%)	증가 (%)	불변 (%)
경북대	273	29.3	50.5	20.1	61.9	12.5	25.6
서울대	202	30.2	42.1	27.7	82.7	5.9	11.4
전남대	88	30.7	53.4	15.9	73.6	8.0	18.4
한양대 1	76	26.3	52.6	21.1	60.5	17.1	22.4
한양대 2	52	53.8	30.8	15.4	71.2	15.4	13.5
전 체	691	31.3	47.2	21.6	70.0	10.7	19.3

〈표 3〉 소득동차성에 대한 설문 결과(문장 질문)

	응답자수 (명)	소득 2배 증가 (문 10)			일정한 소득 증가 (문 11)		
		감소 (%)	증가 (%)	불변 (%)	감소 (%)	증가 (%)	불변 (%)
경북대	273	26.7	43.6	29.7	41.4	8.1	50.5
서울대	202	29.2	40.1	30.7	75.7	4.0	20.3
전남대	88	31.8	30.7	37.5	37.5	9.1	53.4
한양대 1	76	25.0	51.3	23.7	40.8	9.2	50.0
한양대 2	52	36.5	32.7	28.8	55.8	7.7	36.5
전 체	691	28.7	41.0	30.2	52.0	7.1	41.0

## 나. 인구동차성

### 1) 설문 내용

인구동차성에 대한 설문은 그 정의에 따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동일한 소득을 가진 구성원들이 복제되어 같은 소득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두 명이 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림 2) 인구동차성에 대한 설문

**<숫자 질문>**  
 3) A = (5, 8, 10)                      B = (5, 5, 8, 8, 10, 10)

**<문장 질문>**  
 12) 3명으로 구성된 사회를 복제하여 6명으로 구성된 사회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따라서 6명은 각각 쌍둥이 3쌍으로 구성됩니다).  
 a) 상대적 소득 비중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6명으로 구성된 사회는 3명으로 구성된 사회와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가 같다.  
 b) 쌍둥이들은 각각 같은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6명으로 구성된 사회는 3명으로 구성된 사회와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하였다.  
 c) 6명으로 구성된 사회는 3명으로 구성된 사회와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였다.

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질문 3)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A = (5, 8, 10)                      B = (5, 5, 8, 8, 10, 10)

2) 설문 결과

숫자(문 3)와 문장(문 12)으로 구성된 인구동차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대부분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이 만족하고 있는 이 공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하만이 동의하고 있다. 숫자 질문에 대해서는 36.6%만이, 문장 질문에 대해서는 44.6%만이 같은 소득을 가진 인구로 사회구성원이 두 배로 늘어날 때 소득불평등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숫자 및 문장 질문에 대하여 각각 58%, 66%가 동의하고 있는 데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표 4> 인구동차성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수 (명)	숫자(문 3)			문장(문 12)		
		감소 (%)	증가 (%)	불변 (%)	감소 (%)	증가 (%)	불변 (%)
경북대	273	54.6	13.7	31.7	47.3	14.3	38.5
서울대	202	50.0	5.0	45.0	45.5	4.5	50.0
전남대	88	56.8	12.5	30.7	42.0	14.8	43.2
한양대 1	76	42.1	13.2	44.7	39.5	11.8	48.7
한양대 2	52	61.5	11.5	26.9	40.4	7.7	51.9
전 체	691	52.7	10.7	36.6	44.7	10.7	44.6

다. 이전원칙

1) 설문 내용

이전원칙에 대한 설문은 그 정의에 따라 한 사회의 평균 소득은 변함이 없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이전해 주는 경우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2) 설문 결과

이전원칙은 사회구성원 중 두 명만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자명하다. 즉 두 명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의 일부를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명한 결과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명하지 않게 된다. 이는 전체 구성원의 소득분포가 고려되는 경우 두 명의 관계가 전체 구성원 소득분포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부분적인 소득이전보다는 전체의 분포 변화에서 소득불평등도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림 3] 이전원칙에 대한 설문

**<숫자 질문>**  
 4) A = (1, 4, 7, 10, 13)      B = (1, 5, 6, 10, 13)

**<문장 질문>**  
 13) 다른 사회구성원의 소득 변화 없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소득이전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소득이전 후에도 여전히 더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a)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b) 이 소득이전의 결과로 다른 사회구성원의 상대적 지위가 변화하였으므로 사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  
 c) 위의 두 대답은 모두 적당하지 않다.

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질문 4)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A = (1, 4, 7, 10, 13)      B = (1, 5, 6, 10, 13)

〈표 5〉 이전원칙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수 (명)	숫자(문 4)			문장(문 13)		
		긍정 (%)	강한 부정 (%)	부정 (%)	긍정 (%)	강한 부정 (%)	부정 (%)
경북대	273	40.4	47.8	11.8	44.1	35.3	20.6
서울대	202	59.2	26.9	13.9	50.0	28.7	21.3
전남대	88	37.5	52.3	10.2	35.2	43.2	21.6
한양대 1	76	37.3	52.0	10.7	36.8	36.8	26.3
한양대 2	52	44.2	53.8	1.9	48.1	25.0	26.9
전 체	691	45.5	43.2	11.3	44.2	33.8	22.0

구성된 설문을 살펴보면 별 다른 트릭은 없다. 소득분포는 A와 B 모두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단지 두 명의 소득만이 변화하였고 이들 변화한 소득은 가장 부자 쪽이거나 가장 가난한 쪽이 아닌 중간 정도에 바로 인접하게 배열되어 있다.

만약 응답자들이 B의 소득분포가 A보다 덜 평등하다고 답하면 이전원칙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A와 B가 동일하다고 답하면 이전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의 경우는 (b)를 답하면 이전원칙을 강하게 부정하며, (c)를 답하면 이전원칙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숫자나 문장의 질문 모두에 절반 이상이 이전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숫자 질문에 35%, 문장 질문에 60%가 동의하는 응답을 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각 45.5%와 44.2%가 동의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숫자 질문의 경우 수정하기 이전에 이전원칙에 동의하는 답변의 비율은 38.1%였으나 수정 이후 45.5%로 증가하였다.

외국의 경우 숫자 질문과 문장 질문의 답의 분포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Amiel and Cowell(1992)은, 문장 질문은 숫자 질문에 비하여 추상적이어서 숫자 질문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C)의 답변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국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질문에 모두 절반 정도가 이전원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원칙에 대한 동의 정도가 타교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라. 분해성

1) 설문 내용

하위집단으로의 분해 가능성의 공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숫자로 구성된 문 5)와 6), 그리고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 14)가 있다. 여기서 문 5)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질문 6)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에 대하여 같은 응답을 한 경우는 분해성 원칙에 동의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설문 구성은 질문 5)의 A와 B는 모두 평균이 7이고, 질문 6)은 질문 5)의 A와 B에 각각 평균인 7의 소득을 가진 2인의 사회구성원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분해성 원칙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추가로 통합된 2인의 소득분포가 통합되기 전 사회의 소득불평등도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을 한 경우로 분류된다.

2) 설문 결과

숫자로 구성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9%가 분해성 공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학교 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장으로 구성된 설문의 경우에는 단지 25.1%만이 분해성 공리에 동의하고 있다. 문장으로 구성된 설문의 경우가 숫자로 구성된 설문의 경우보다 분해성 공리에 대한 동의 여부가 적은 것은 문장에서의 질문이 더 추상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동일한 설문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는 앞의 이전원칙의 공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마찬가지로 숫자 질문의 경우 57%가 동의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

〈표 6〉 분해성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수 (명)	숫자(문 5와 6)		문장(문 14)		
		불변 (%)	변화 (%)	긍정 (%)	강한 부정 (%)	부정 (%)
경북대	273	57.0	43.0	23.1	71.8	5.1
서울대	202	62.4	37.6	28.0	64.5	7.5
전남대	88	56.3	43.7	25.0	65.9	9.1
한양대 1	76	57.9	42.1	23.7	72.4	3.9
한양대 2	52	62.7	37.3	27.5	60.8	11.8
전 체	691	59.0	41.0	25.1	68.2	6.7

나, 문장 질문의 경우는 40%가 동의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분해성에 대한 설문

<숫자 질문>

- 5) A = (4, 8, 9)                      B = (5, 6, 10)  
 6) A = (4, 7, 7, 8, 9)                B = (5, 6, 7, 7, 10)

<문장 질문>

- 14) 동일한 수의 구성원과 동일한 총소득, 그러나 다른 소득분포를 가진 두 사회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가 C라는 사회와 통합되고, B는 C'와 통합되는데 C와 C'는 동일하다. 이 경우
- 통합되기 전에 더 불평등하였던 사회는 통합 후에도 여전히 더 불평등하다.
  - 정확한 분포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 위의 두 대답은 모두 적당하지 않다.

위의 경우(그리고 질문 5)도 포함하여)와 비교하여, 질문 6)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 A = (4, 7, 7, 8, 9)                      B = (5, 6, 7, 7, 10)

마. 공리들 간의 관계

이제까지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개별 공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 여부를 논하였지만 여기서는 소득불평등도의 개별 공리가 아닌 전체 체계를 다루고자 한다. 공리체계에 대해 다룰 내용은 불평등도 순위 비교에 사용되는 이행성(transitivity)과 로렌츠 기준(Lorenz criterion)에 대한 것이다.

1) 설문 내용

이행성은 연속되는 소득분포에 대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순서 비교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소득분포가 B보다 평등하고, B라는 소득분포가 C보다 평등하다면 A는 C보다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성의 성립 여부는 숫자 질문 7) 8) 9)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 7)과 문 8) 모두에서 A가 평등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면, 문 9)에서도 역시 B보다 A가 평등한 소득분포라는 답을 하여야 이



행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문 9)에 대한 응답을 B로 하거나 A와 B가 동일하게 평등하다고 답을 하였다면 그러한 응답자는 이행성을 위배하는 응답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질문 7)과 8)의 결과와 질문 9)의 응답이 이행성에 위배되는 답을 한 경우는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가 익명성, 소득동차성, 인구동차성, 이전원칙의 네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경우 로렌츠 순위를 통한 소득불평등도 비교와 일치하게 된다. 이 네 가지 공리에 분해성을 더한 다섯 가지 기본 공리를 만족시키는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집단지수(*generalized entropy family of inequality measures*; Cowell 1980)라 불린다.

[그림 5] 이행성(transitivity)에 대한 설문

**<숫자 질문>**

7)	A = (5, 5, 5, 10)	B = (5, 5, 10, 10)
8)	A = (5, 5, 10, 10)	B = (5, 10, 10, 10)
9)	A = (5, 5, 5, 10)	B = (5, 10, 10, 10)

**<문장 질문>**

15) n명으로 구성된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부자가 있으며 n-1명의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와 동일한 소득을 가지게 되어 n-1명의 동일한 부자와 단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a)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b)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 c) 불평등도는 처음에 증가하였다가 나중에 감소한다.
- d) 불평등도는 처음에 감소하였다가 나중에 증가한다.
- e) 불평등도는 시종일관 변화가 없다.
- f) 모두 답이 아니다.

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질문 7) 8), 9)에 대한 답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새로운 답을 여기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7)	A = (5, 5, 5, 10)	B = (5, 5, 10, 10)
8)	A = (5, 5, 10, 10)	B = (5, 10, 10, 10)
9)	A = (5, 5, 5, 10)	B = (5, 10, 10, 10)

2) 설문 결과

응답자들이 소득불평등도의 비교에 있어 이행성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숫자 질문 7) 8) 9)의 3차 교차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의 약 7%만이 이행성에 위배되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외국의 11%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부표 9 참조).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로렌츠 곡선을 통한 로렌츠 순위와 동일하게 여기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규모비의존성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숫자 질문의 경우 5.2%, 문장 질문의 경우 8.0%만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 중 로렌츠 곡선을 통한 소득불평등도 비교 순위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14%와 20%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7> 이행성에 대한 설문 결과

	숫자 (문 7, 8, 9)	문장 (문 15)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9.4	8.0
지속적으로 감소	27.4	26.1
증가하다 감소	24.3	21.3
감소하다 증가	30.4	29.8
계속 동일	0.72	8.7
해당 사항 없음	0.43	6.1
이진성을 만족하지 못함	7.2	-
무응답 또는 일부 응답	0.1	-
전체(691)	100.0%	100.0%

<표 8> 로렌츠 기준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 수 (명)	숫자(문 1, 3, 4)		문장(문 10, 12, 13)	
		동의 (%)	부정 (%)	동의 (%)	부정 (%)
경북대	273	3.0	97.0	6.6	93.4
서울대	202	9.0	91.0	9.9	90.1
전남대	88	2.3	97.7	6.8	93.2
한양대 1	76	8.0	92.0	6.6	93.4
한양대 2	52	3.8	96.2	11.5	88.5
전체	691	5.2	94.8	8.0	92.0

한편 익명성, 소득동차성, 인구동차성, 이전원칙에 분해성의 공리를 더하여 일반화된 엔트로피집단지수들이 만족하는 모든 공리에 동시에 동의하는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장 질문 기준으로 2.3%만이 동의하고 있어 외국의 9%에 비하여 역시 낮은 수준이다.

<표 9>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공리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 수 (명)	문 10, 12, 13, 14	
		동의 (%)	부정 (%)
경북대	273	1.8	98.2
서울대	202	3.5	96.5
전남대	88	1.1	98.9
한양대 1	76	1.3	98.7
한양대 2	52	3.9	96.1
전 체	691	2.3	97.7

#### IV. 각 불평등도 지수의 특징 및 추이

제II장에서 언급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서 극화 지수는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을,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을 각각 완화한 지수이다.

여기에서는 각 지수의 유도 과정과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하고,<sup>3)</sup> 공리체계의 일부가 달라짐에 따른 이론적 차이가 과연 실증적으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만약 앞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및 설문조사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분포의 변화 정도를 실증적으로 다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각 지수의 구체적인 유도 과정은 유경준(2007)을 참조할 수 있다.

## 1. 각 불평등도 지수의 이론적 비교

### 가. 상대적 불평등도 지수와 절대적 불평등도 지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소득분포의 분산을 추정하기 때문에 각 사회구성원의 소득격차의 정도가 불평등도 추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소득격차의 정도는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소득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거리감(소외감, alienation:  $A$ )으로 해석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_i(x) = \sum_{j=1}^n |x_j - x_i|$$

사회구성원 중에서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라면 상대적 빈도( $\pi_j$ )를 이용하여 그 거리감은

$$A_i(x) = \sum_{j=1}^n |x_j - x_i| \pi_j \text{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도(inequality:  $I$ )는 이러한 거리감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I(x) = \sum_{i=1}^j \pi_i A_i(x) = \sum_{i=1}^n \sum_{j=1}^n \pi_i \pi_j |x_j - x_i|$$

위 식은 평균격차(mean difference)로 정의된다. 이 평균격차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극화 지수(polarization measure)들의 기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평균격차는 절대평균격차(absolute mean difference) 또는 지니평균격차(Gini mean difference)라 불리며,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2배 값을 가진다.

$$\text{절대지니} = \frac{1}{2} \sum_{i=1}^n \sum_{j=1}^n \pi_i \pi_j |x_j - x_i|$$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로서 절대적 지니계수를 평균값( $\mu$ )으로 나누어 주어 정규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4)

$$\text{상대지니} = \frac{1}{2\mu} \sum_{i=1}^n \sum_{j=1}^n \pi_i \pi_j |x_j - x_i|$$

따라서 상대적 지니계수는 앞서 살펴본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서 소득동차성 (income homogeneity)을 만족시키게 되나, 절대적 지니계수는 평균으로 정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비율로 변하는 경우 계수의 값이 변화하게 되어 소득동차성의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는 평균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지니계수의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의 증가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성장하는 경제는 거의 예외 없이 절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게 된다.

#### 나. 극화 지수(polarization measure)

한편 양극화 지수를 위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개인이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다른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낀다면,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고려한 유효이질감(effective alienation: EA)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A_i(x) = \pi_i^\alpha A_i(x) = \pi_i^\alpha \sum_{j=1}^n |x_j - x_i| \pi_j$$

위의 식에서  $\alpha$ 는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1에서 1.6 범위의 값을 가지게 된다 (Esteban, Gradin, and Ray 1999).

따라서 사회 전체의 극화(polarization: P) 정도는 이러한 유효이질감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P(x) = \sum_{i=1}^n \pi_i EA_i(x) = \sum_{i=1}^n \sum_{j=1}^n \pi_i^{1+\alpha} \pi_j |x_j - x_i|$$

이 식이 바로 Esteban and Ray(1994)의 지수(ER 지수)이며, Esteban, Gradin, and Ray(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화된 ER 지수인 EGR 지수의 일부를 나타낸다.

---

4) 한편 상대평균격차는 상대지니의 두 배로 정의된다.

이 지수에서는  $\alpha$ 의 값이 커짐에 따라 동일소득집단이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가 강화 될 것이다.  $\alpha=0$ 인 경우는 앞에 제시되어 있는 절대적 지니계수의 식과 같게 된다.

EGR 지수는 ER 지수가 가지는 한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수이다. ER 극화 지수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구성원이 동질감과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을 이질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할 것인가(number of group) 또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후에는 집단을 분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location of group)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EGR 지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느냐에 대한 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나, 집단의 수가 결정된 후 집단 간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원칙을 보완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즉 EGR 지수는 전체 집단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집단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집단의 초기 분포에 대한 상실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시킨 지수를 의미한다. Esteban, Gradin, and Ray(1999)는 일정 범위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두 집단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집단이  $n$ 개로 분할되는 일반적인 경우 오차를 최소화한 최종 EGR 지수는  $EGR = ER(\alpha, \rho^*) - \beta[G(F) - G(\rho^*)]$ 로 표시된다. 여기서  $G$ 는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 EGR 지수는 양극화 지수를 의미하는  $EGR_{n=2} = (1+\beta)D - \beta G(D)$ 는 평균편차(mean deviation)를 의미하며,  $\pi_\mu - L(\pi_\mu)$ 로 표시되어, 평균 이하의 소득계층 비율에서 평균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차감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로 표시될 수 있다(Esteban, Gradin, and Ray 1999).

한편 또 다른 극화 지수의 하나인 W(Wolfson)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며(Wang and Tsui 2000), 중산층으로부터 소득분포가 양 끝으로 퍼진다면 지수는 증가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W = \frac{\mu}{m} \left[ \frac{1}{2} - L - \frac{G}{2} \right]$$

여기서  $\mu$ 는 평균소득(mean income),  $m$ 은 중위소득(median income),  $G$ 는 지니계수,  $L = L(\frac{1}{2})$ 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극화 지수는 이전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다

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olfson(1994, 1999)과 Esteban and Ray(1994)에 의해 제기된 극화의 개념은 하나의 중심의 존재와 그 중심에 대한 분포를 측정하는 불평등도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분포에서 하나의 중심과는 다른 중심들에서 발생하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극화의 개념이 필요하다. Esteban and Ray(1994, p.21)는 “불평등도 지수의 공리들은 전국적인 평균에 ‘수렴(convergence)’하는 것과 국지적인 평균에 ‘집락화(clustering)’하는 것을 절절하게 식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수렴하게 되면 불평등도와 극화가 둘 다 감소하나, 집락화하면 불평등도는 감소하나 극화는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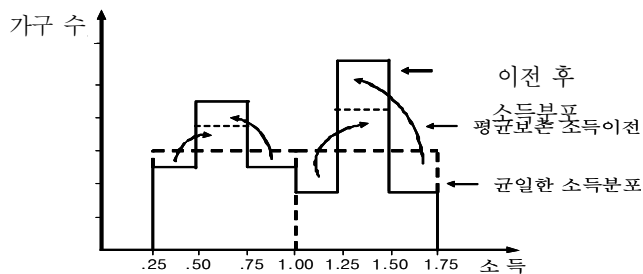
따라서 극화의 개념은 기존의 상대적 불평등도 지수가 내포하고 있는 이전원칙을 위배한다. Wolfson(1994, 1999)과 Esteban and Ray(1994)는 공통적으로 불평등도 지수와 극화 지수가 다른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그림 6]은 두 종류의 가상적인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소득분포는 0.25와 1.75 사이에서 사회구성원이 같은 비중의 소득을 가지는 균일한 분포(uniform distribution)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소득분포는 중간층이 줄어들든, 즉 양측으로 나누어진 소득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점선의 분포에서 실선의 분포로, 즉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자가 빈자에게 소득을 이전(mean-preserving income transfer)함으로써 소득분포가 변화하면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에 의해 소득불평등도가 감소된 것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극화 지수는 이러한 이전원칙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층이 감소하거나 소득계층이 ‘집락화(clustering)’되는 경우 불평등도는 증가하게 되는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림 6] 극화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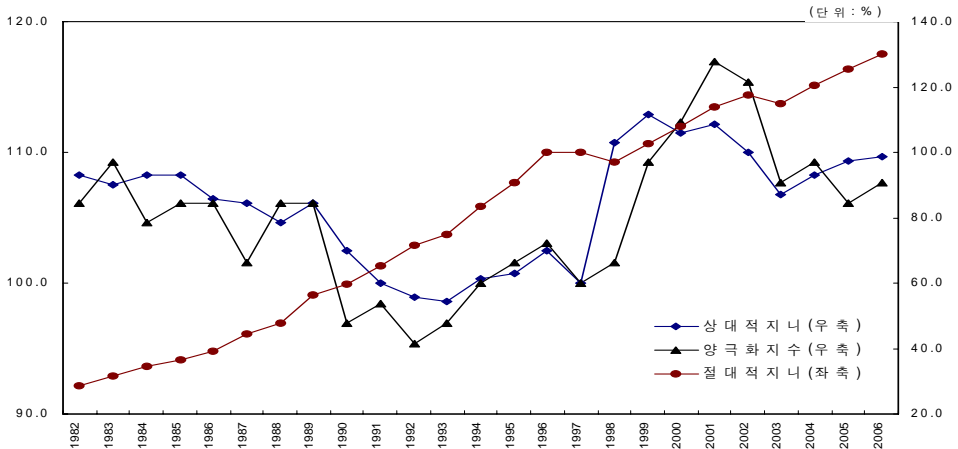
## 2. 불평등도 지수의 실증적 비교

서로 다른 공리체계를 가지고 등장한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본고에서 추정한 각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유경준(2007)의 연구 결과를 2006년까지 확장한 것이다. 연도별 추정을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와 극화 지수는 그 추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2년에서 2006년까지 이들 지수의 상관계수는 0.8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사하다.<sup>5)</sup>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적 지니계수와 절대적 지니계수는 상당히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지수의 이론적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지니계수는 상대적 지니계수에 평균소득이 곱

(그림 7) 불평등도와 양극화 지수의 추이



주 : 모두 1997년을 100으로 지수화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각년도)에서 계산(2005년까지의 결과는 유경준[2007]에서의 원수치를 이용하였음)

5)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 지니와 상대적 지니: 0.235(통계적 유의성 없음,  $p=0.258$ ), 상대적 지니와 양극화 지수: 0.824\*\*\* (통계적 유의성 있음,  $p<0.001$ ), 절대적 지니와 양극화 지수: 0.314 (통계적 유의성 없음,  $p=0.126$ ).



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경우 그 개념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차이는 개념에서 오는 차이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상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소득분포 변화는 성장의 결과로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소득계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양분되는 소득계층의 양극화(bi-polarization) 현상이 최근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도시가계조사가 도시거주의 임금 및 봉급 근로자(wage and salary workers)로 한정된 표본이어서 전국의 가계를 대표하기에는 제한된 통계자료이기는 하지만, 1982년 이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의 변동 추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지니계수는 1998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고 있어 타지수와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공리체계를 가진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이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동차성, 인구동차성, 이전원칙 등 각 개별 공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오히려 개별 공리에 대하여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학교별로나 전공별 또는 경제학과 수강 과목 수의 차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sup>6)</sup>

불평등도 지수와 관계되는 개별 공리에 대한 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6) 이 점은 보고에서 차이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는 본고의 분석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추가적인 설문의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이다.

과 같다.

소득동차성에 대한 설문 결과, 규모비의존성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변환비의존성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더욱 뚜렷이 성장의 성과가 기존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사회구성원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도로 전달되는 성장의 경로에 일반국민이 현 시점에서 좀 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원칙에 대한 설문 결과 숫자와 문장 질문 모두에 대하여 45% 내외가 동의하고 있어 다수가 이전원칙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결과는 외국에 비해서 숫자 질문의 경우에는 높고 문장 질문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문장 질문에 대한 동의가 숫자 질문에 대한 동의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양자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sup>7)</sup>. 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문장 질문이 숫자 질문에 비하여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이전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는 숫자 질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전원칙에 대한 동의 정도는 우리나라와 외국이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경우에 너무나 자명한 이전원칙이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경우 동의 정도가 50%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이 부분적인 소득이전보다는 전체 분포의 변화에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공리들로 구성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불평등도 전체의 비교체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니계수(또는 로렌츠 기준)로 대표되는 전체의 공리체계에 동의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다수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비교에 사용되는 지니계수의 기본 가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기존의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

7) 이 설문과 관련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설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분석하기 어렵다. 다만 익명의 심사가가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 스스로가 논리적 일관성을 의식하면서 답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득불평등도의 개념이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지니계수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 외국 학계에서 등장한 것이 극화(polarization) 지수이다.

이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절대적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부자와 빈자의 절대적 소득격차를 추정하는 지수가 절대적 지니계수이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학계에서는 극화 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인의 생각은 오히려 절대적 소득격차를 좀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각 소득불평등도의 실증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 불평등도와 극화 지수는 상대적 불평등도 지수의 공리체계에서 각각 한 가지 가정을 완화하고 등장한 지수이다. 즉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지니는 소득동차성을, 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EGR 지수는 이전원칙을 완화하고 등장한 지수이다.

두 개의 소득불평등도 지수의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변동 추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지니계수와 절대적 지니계수는 상당한 차이로, 상대적 지니계수와 극화 지수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극화 지수는 이론적으로 다른 틀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나 실증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다른 지수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로서의 극화 지수는 상대적 지니계수와 별 다른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지니계수는 상대적 지니계수와 그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부자와 빈자의 절대적인 소득격차를 추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도 매우 다른 추정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와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다른 기반을 가진 소득불평등도 지수들이 실증적으로도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인다면 어떤 지수가 현실(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반영하느냐가 소득분배 관련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

각각의 소득불평등도의 개념 모두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설문

결과는 불평등의 상대적 기준이나 절대적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 모두를 단일한 정책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극화 지수와 상대적 지니계수는 비록 그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책 지표로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으나,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의 소득불평등도는 무엇을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정책 지표로 설정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설문의 결과와 실증적 추정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결과 절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보다는 이러한 절대적 소득격차의 증가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인식에 따라 불평등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축소하는 정책보다 절대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적 소득격차를 지나치게 줄이고자 하면 성장의 속도가 저하되어 오히려 절대빈곤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유경준 2007).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성장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분배)의 관계는, 소득의 경우 성장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향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으나, 소득이 아닌 부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유경준 2006).

지나친 부의 불평등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가난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일 기회, 즉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과 지나친 형평의 추구가 근로의욕과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저하를 위한 정책수단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도 많지 않고, 알려진 것이 일부(교육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 있으나 수단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배정책에 치중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절대빈곤율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sup>8)</sup> 즉 2002년 이후 빈곤율이

정체되는 현상은 분배(상대 또는 절대적 기준)의 개선만으로는 절대빈곤의 감소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같은 성장률하에서(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면 빈곤의 감소는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절대빈곤의 감소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본고의 불평등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과제는 성장의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절대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절대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경우라도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효율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게 상위 소득계층의 축소보다는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제고되어야 하겠지만, 소득분배에 있어 지나친 형평의 추구는 성장의 감소와 절대빈곤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절대빈곤의 감소에는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은 한 국가의 국가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그 목표를 빈곤 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성장전략을 택하는 것이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개별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한 발전전략이 무엇이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pro-poor growth)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유경준(2007), p.44, <표 4-4>를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유경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28권 2호 (2006. 12),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한국개발연구원, 2007. 4.
- Aniel, Y., and Cowell, F. A., “Measurement of Income Inequality: Experimental Test by Questionnai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7 (1992): 3-26.
- \_\_\_\_\_. *Thinking about In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and Xavier Ramos.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A Questionnaire Stud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March 2007.
- Cowell, F. “Measures of Distributional Change: An Axiomatic Approac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2 (1985): 135-151.
- Cowell, F. *Measuring Inequality*. 2nd edition, London: Prentice Hall/Harveste Wheatsheaf, 1995.
- Esteban, J. M., and Ray D.,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1994): 819-851.
- Esteban, J. M., Gradin. C. and Ray D.,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o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1999.
- Wang, You-Qiang, and Kai-Yuen Tsui. “Polarization Orderings and New Classes of Polarization Ind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2 (3) (2000): 349-363.
- Wolfson, Michael C.,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2) (May 1994): 353-358.
- Wolfson, Michael C.,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 (4) (1997): 401-421.
- Zhang, Xioabo, and Ravi Kanber. “What Difference Do Polarization Measures Make? An Application to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 (3) (February 2000): 85-98.

### 〈부록〉 외국의 소득불평등도 설문 결과

\* 아래 부표의 순서는 본문 제Ⅲ장의 표 순서와 같음. 출처는 <표 7>을 제외하고 모두 Amiel and Cowell(1992).

〈부표 1〉

Institution	Country	Number of respondents
North Texas University	U.S.A.	37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U.S.A.	108
London School of Economics	U.K.	106
University of Bonn	F.R.G.	356
University of Karlsruhe	F.R.G.	53
Hochschule für Unternehmensführung, Koblenz	F.R.G.	50
Ruppın Institute	Israel	174
Hebrew University, Jerusalem(economists)	Israel	170
Hebrew University, Jerusalem(non-economists)	Israel	54
All		1,108

〈부표 2〉

	N	Double income (q1)			Add 5 units (q2)		
		Down (%)	Up (%)	Same (%)	Down (%)	Up (%)	Same (%)
N. Texas	(37)	27	32	41	38	11	46
SMU	(108)	19	38	42	32	19	46
LSE	(106)	8	32	59	63	2	35
Bonn	(356)	11	31	58	63	8	28
Karlsruhe	(53)	7	40	53	76	9	15
Koblenz	(50)	26	36	38	72	8	20
Ruppın	(174)	13	32	55	70	4	26
Hebrew econ.	(170)	21	38	41	51	19	30
Hebrew non-econ.	(54)	11	39	50	57	2	41
All	(1,108)	14	35	51	59	9	31

〈부표 3〉

	N	Double income (q10)			Add fixed sum (q11)		
		Down (%)	Up (%)	Same (%)	Down (%)	Up (%)	Same (%)
N. Texas	(37)	5	24	70	38	11	51
SMU	(108)	14	32	48	25	8	62
LSE	(106)	13	38	46	61	7	32
Bonn	(356)	12	30	58	61	3	35
Karlsruhe	(53)	17	55	28	62	28	9
Koblenz	(50)	26	36	36	48	8	42
Ruppın	(174)	10	49	40	67	6	27
Hebrew econ.	(170)	6	52	40	75	6	19
Hebrew non-econ.	(54)	13	52	35	39	4	57
All	(1,108)	12	40	47	58	6	35

〈부표 4〉

	N	Double income (q3)			Verbal (q12)		
		Down (%)	Up (%)	Same (%)	Down (%)	Up (%)	Same (%)
N. Texas	(37)	41	19	41	38	14	49
SMU	(108)	44	18	35	32	12	51
LSE	(106)	29	9	61	25	9	65
Bonn	(356)	31	6	62	19	6	73
Karlsruhe	(53)	28	13	58	22	8	68
Koblenz	(50)	40	10	50	22	2	76
Ruppın	(174)	32	5	63	18	9	66
Hebrew econ.	(170)	18	15	66	22	12	65
Hebrew non-econ.	(54)	39	13	48	22	11	63
All	(1,108)	31	10	58	22	9	66



<부표 5>

	N	Numerical (q4)			Verbal (q13)		
		Agree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Agree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 Texas	(37)	22	51	27	41	38	19
SMU	(108)	32	51	14	44	29	20
LSE	(106)	45	39	16	66	23	11
Bonn	(356)	31	45	24	54	28	15
Karlsruhe	(53)	45	34	19	57	30	13
Koblenz	(50)	46	46	8	62	26	12
Ruppın	(174)	33	38	29	62	24	14
Hebrew econ.	(170)	42	38	19	83	7	6
Hebrew non-econ.	(54)	24	43	33	50	28	20
All	(1,108)	35	42	22	60	24	14

<부표 6>

	N	Numerical (qq5 & 6)		Verbal (q14)		
		Same (%)	Different (%)	Agree (%)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 Texas	(37)	43	51	40	40	11
SMU	(108)	55	41	40	40	11
LSE	(106)	63	36	42	50	8
Bonn	(356)	60	39	36	53	10
Karlsruhe	(53)	64	36	43	49	4
Koblenz	(50)	62	38	46	48	6
Ruppın	(174)	62	38	38	42	18
Hebrew econ.	(170)	48	51	44	31	16
Hebrew non-econ.	(54)	48	48	37	35	9
All	(1,108)	57	41	40	45	11

## 〈부표 7〉 이행성과 쿠즈네츠 경로에 대한 설문 결과

	숫자 (문 7, 8, 9)	문장 (문 15)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8	4
지속적으로 감소	8	8
증가하다 감소	26	54
감소하다 증가	42	3
계속 동일	3	8
해당사항 없음	1	18
이전성을 만족하지 못함	11	-
무응답 또는 일부 응답	1	5
전 체(1,108)		

자료: Amiel and Cowell(1999).

## 〈부표 8〉

	N	Numerical (qq 1, 3, 4)		Verbal (qq 10, 12, 13)	
		Agree (%)	Disagree (%)	Agree (%)	Disagree (%)
N. Texas	(37)	8	92	16	81
SMU	(108)	9	87	9	89
LSE	(106)	23	75	22	73
Bonn	(356)	13	86	24	72
Karlsruhe	(53)	23	75	11	89
Koblenz	(50)	12	88	16	82
Ruppig	(174)	12	88	18	79
Hebrew econ.	(170)	15	84	26	67
Hebrew non-econ.	(54)	6	94	13	83
All	(1,108)	14	85	20	76

〈부표 9〉

	N	Questions 10, 12, 13, 14	
		Agree (%)	Disagree (%)
N. Texas	(37)	8	84
SMU	(108)	5	86
LSE	(106)	12	83
Bonn	(356)	10	85
Karlsruhe	(53)	8	89
Koblenz	(50)	10	88
Ruppin	(174)	6	88
Hebrew econ.	(170)	11	77
Hebrew non-econ.	(54)	7	76
All	(1,108)	9	84

abstract

---

## The Concept and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Gyeongjoon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① to compare the awareness of inequality concep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the survey, ② to identify whether several inequality measures, which have diverse concepts, are different in empirical aspect, and ③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income distribution polic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urvey has shown a surprising fact in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do not agree with the basic assumptions outlined by Gini coefficient, which is the relative inequality measures that had been generally accepted in the past. These result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major difference with other countries is that the Koreans feel that absolute income inequality—the income gap between the poor and rich, has increased more than relative income inequality, when all incomes of social members are doubled.

From the resul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bi-polarization index is different from Gini coefficient in statistical aspect although it has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should seek to promote "the pro-poor growth" since the change of inequality affect differently on the change of growth and inequality depending on whether the inequality change is relative or absolute.

Key Words: Relative Inequality, Absolute Inequality, Bi-polarization, Pro-poor Growth